충남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고수현 | 금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6. 5. 31 지방선거를 거쳐 같은 해 7월 1일부터 민선4기(2007~2010)시대에 접어 든 충남도정은 이제 한 해 반 정도를 넘기고 있는 시점에 와 있다. 지난 1995년에 관선 도정시기를 접고 민선기로 전환된 이후 민선1.2기(1995~2002)에서는 주민번영에 초점을 두고, 개성 있는 충남건설을 지향하였다. 아울러 민선3기(2003~2006)에서는 '인본복지'와 '지식경영'을 도정의 기조로 삼고 비교적 안정적인 민선자치정부를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선4기인 현재의 충남도정의 환경은 대내·외적으로 역동적인 변화과정에 있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 우선 연기·공주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와 홍성·예산의 도청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현재의 200만명 정도의 인구가 250만명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고 이로 인하여 도민의 복지욕구도 이전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대두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 도정방침이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함께 하는 복지사회' 등을 내걸고 있는 것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측면이기도 하다.

하지만 도정방침이 산업경제부문의 발전과 복지부문의 양대 분야를 내걸고 있다고 해서 바람직한 도정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다. 임기가 정해져 있는 광역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산업경제와 지역개발부문에 치중된 전략을 견지할 성향이 많고 사회복지와 같이 계량적 산출물을 만들어 내기가 어려운 부문에는 역량강화의 한계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1세기는 저출산·고령사회가 최대의 정책

이슈가 되고 있고, 충남도의 경우에도 광역시와 달리 노인인구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노인층의 복지에 초점을 둔 사회복지정책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민선4기가 출범된 지 초반부를 어느 정도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충청남도의 노인복지 실태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대응과제를 모색하는 데 직접적인 목적을 둔다.[1]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충남도정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향후의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업법상에 따른 지방정부 단위의 복지정책 마스터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이나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별로 세분된 개별적인 복지계획이 아니라 도정의 복지행정 분야 중에서 노인복지분야를 대상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2]

그렇다면 노인복지부문의 충남도정이 지행해야 할 주요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충남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와 노인복지부문의 현황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단계의 연구자료 분석방법을 택할 필요가 있다.

첫 단계에서는 전국적인 사회복지 환경을 검토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정책과 함께 노인복지사업지침을 기본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는 상당수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이양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국가책임으로 국비를 대부분의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방정부인 충남도와 시·군 단위에서 추진 중인 복지정책과 노인복지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즉 노인복지정책이나 행정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 수혜자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급여재정은 어느 정도인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어떠한지를

1) 필자는 2006. 7. 1에 발간된 '민선4기 충남도정의 과제(사회복지분야)'에서 지난 민선3기의 충남도정을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과 도청이전이라는 정치·경제적인 차원의 '지역개발' 이슈에 초점을 둔 도정으로 간주하고, 민선4기의 충남도정은 사회적 환경 변화에 바탕을 둔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과 복지행정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열린 충남, 제35호 참조)

2) 지방정부의 도정이나 시정과제라고 한다면 자치행정, 복지행정, 지역개발행정의 3대 부문으로 구분하거나 문화부문을 더하여 4대 부문의 과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당지역의 여건이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정과제가 차이가 나거나 중점추진과제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는 있다.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노인복지현황을 충청남도 복지환경국 산하의 복지정책과 업무소관으로 배치되어 있는 '경로복지담당'과 '저출산고령화담당'에서 추진 중인 노인복지정책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파악된 현황을 바탕으로 진단과 함께 부문별 과제와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연구 내용을 함축적으로 정리하고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것으로 종결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은 노인복지정책이나 행정 중에서 공공부조부문과 사회복지서비스부문에 한정하였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사회보험분야가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된다는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큰 사회보험부문은 다루지 않았다. 단지,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노인요양서비스 부문은 같이 연구하였음을 밝힌다.

Ⅱ. 충남의 노인복지 현황과 분석

1. 노인인구 및 고령화 분석

1) 노인인구현황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는 49백만명이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5백만명 정도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70년에 전체 인구의 3.1%에 불과했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 337만명(7.2%)으로 UN에서 규정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다. 그리고 2005년에는 9.1%에서 2015년 12.9%, 2019년에는 14%인 고령사회(aged society)를 지나고 2030년에는 24.1%까지 높아지게 될 것으로 통계청은 시·도별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에서 전망하고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청남도의 경우 2006년 말을 기준으로 전체인구 1,974,433명 중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271,346명(남 109,310명, 여 162,036명)으로 13.7%에 달하고 있다. 이는 당초 통계청이 시·도별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 2005년 말 기준으로 14.4%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보다는 다소 완화된 수치이지만 전라남도 다음으로 고령화 진척도가 빠르다는

〈표 1〉 시 · 군별 노인 인구 현황(2006년 12월 기준)

(단위 : 명)

구분	구분			전체 인구 (명)	노인 인구 비율(%)	비고 (고령정도)
	계	남	여			
계	271,346	109,310	163,036	1,974,433	13.7	고령화사회
천안시	36,842	14,388	22,454	523,323	7.0	고령화사회
공주시	20,399	8,304	12,095	128,330	15.9	고령사회
보령시	17,045	6,886	10,159	107,591	15.8	고령사회
아산시	22,994	9,282	13,712	211,560	10.9	고령화사회
서산시	19,773	7,882	11,891	150,889	13.1	고령화사회
논산시	22,291	8,917	13,374	131,466	17.0	고령사회
계룡시	2,390	804	1,586	36,846	6.5	-
금산군	11,779	4,694	7,085	57,552	20.5	초고령사회
연기군	12,494	5,028	7,466	82,747	15.1	고령사회
부여군	17,483	7,139	10,344	79,595	22.0	초고령사회
서천군	14,388	5,779	8,609	62,629	23.6	초고령사회
청양군	8,686	3,652	5,034	34,086	25.5	초고령사회
홍성군	16,339	6,679	9,660	89,555	18.2	고령사회
예산군	17,346	7,222	10,124	89,585	19.4	고령사회
태안군	11,457	4,651	6,806	63,754	18.0	고령사회
당진군	19,640	8,003	11,637	124,925		고령사회

자료 : 충청남도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재정리.

접에서 본다면 세부적인 고령화 분석과 함께 대응책 강구가 필요하다.

2) 고령화 현상분석

인구학적 측면에서 고령화의 속도를 분석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노인복지대상자의 범주를 정하여 그에 맞는 노인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척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단 노인복지를 비롯한 사회복지정책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정책의 형성과 결정에도 지대한 영향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만큼 선진 각국에서도 저출산 · 고령사회에 대응한 국가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미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인구인 일본은 1980년대 중반부터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에 대응한 이른바 '골드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며 그보다 100년 이상

고령화 사회에 먼저 진입한 프랑스(1864년)나 스웨덴(1887년), 이탈리아(1927년), 영국(1929년), 독일(1932년), 미국(1942년), 캐나다(1945년) 등에서도 고령사회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들 구미 선진국은 고령화의 속도가 완만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국가나 사회정책추진에서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고령화의 충격(shock)이 그리 심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7%의 고령화 사회에서 14%의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115년이 소요되었으며 캐나다는 65년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일본은 24년이 소요되었고 우리나라는 19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20%의 초고령사회로 다가서는 기간도 그 후 7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을 전망이어서 국가나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의 고령화 정도를 분석해 보면 2005년 기준으로 울산(5.2%), 대전(6.7%), 인천(6.9%), 서울(7.1%), 경기(7.1%), 광주(7.0%), 대구(7.8%), 부산(8.4%) 등의 대도시와 수도권이 전국 평균 9.1%보다 낮고, 전남(17.5%)이 가장 고령화 정도가 높고 그 다음이 충남(14.4%)의 순서이다. 여기에서 충남의 경우 2006년 말 기준의 13.7%에 비하여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중·소 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유치되고 있고, 국외 이주 노동자 및 결혼 이민자들이 유입되어 젊은 층이 늘어난 것에서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충남의 고령화 정도를 시·군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청양군이 25.5%로 가장 높으며, 서천(23.6%), 부여(22%), 금산(20.5%)과 함께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그 다음은 예산, 홍성, 태안, 논산, 공주, 보령, 당진이 이미 14% 비율을 넘어선 고령화 사회에 있다. 그리고 유일하게 특례시인 계룡시의 경우에만 6.5%로 고령화 사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2005년 통계자료에서 대학이 밀집된 천안시가 6.7%에서 2006년 말에 7.0%로 상승한 것을 보면 국방부 등의 군 인적 자원이 많은 계룡시라 할지라도 1~2년 내에 고령화 사회에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2. 노인복지시설·기관 현황과 분석

1)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현황

충청남도의 시·군별 노인복지시설을 크게 생활시설(수용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하여 현황을 보면 16개 시·군 전체가 66개소이며, 이 중에서 생활시설이 30개소, 이용시설이 36개소이다.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16개소(생활 3, 이용 13), 부여 7개소, 아산 6개소, 논산과 공주가 각 5개소로 시설이 많은 편이다.

〈표 2〉 시·군 노인복지시설 현황(2006년 12월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계	생활시설	이용시설
시·군계	66	30	36
천안시	16	3	13
공주시	5	2	3
보령시	3	3	·
아산시	6	3	3
서산시	2	1	1
논산시	5	3	2
계룡시	·	08년도 신축 1개소	·
금산군	3	1	2
연기군	4	3	1
부여군	7	3	4
서천군	3	1	2
청양군	2	08년도 신축 1개소	2
홍성군	3	2	1
예산군	3	(2곳 신축 중)	1
태안군	·	08년도 신축 1개소	·
당진군	4	3	1

자료 : 충청남도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재정리.

이외에 노인복지시설 중에서도 시·군의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은 비교적 영세한 규모의 이용시설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노인정 형태로 마을 단위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노인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지정한 후 지방의원들이 관심 사업으로 신축을 지원하거나 신규지정 건수를 늘리게 된 것에 원인한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말 기준으로 총 5,226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2001년에 비하면 1,000여 개소가 늘어난 것이다.

〈표 3〉 경로당 현황(2006년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개소	5,226	5,097	4,909	4,696	4,495	4,287	4,082	3,887

자료 : 충청남도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2) 노인복지시설 분포

충남도내에 분포된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현행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시설 유형에 따라 구분해보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이 37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이 45개소, 노인여가복지시설이 경로당 5,254개소를 제외한 53개소,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 35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다.

〈표 4〉 노인복지시설 분포(2006년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시설	전국	충남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145	5	-	-	-	1	-	-	-	1	2	-	-	-	1	-	-	-
	실비양로시설	132	15	5	-	-	-	-	-	-	2	5	-	-	-	-	2	-	1
	유료양로시설	74	17	2	1	-	-	-	-	-	3	-	-	2	-	4	2	1	2
	실비노인복지주택	-	-	-	-	-	-	-	-	-	-	-	-	-	-	-	-	-	-
	유료노인복지주택	15	-	-	-	-	-	-	-	-	-	-	-	-	-	-	-	-	-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174	10	-	-	1	1	1	2	-	-	1	1	1	-	1	-	-	1
	실비노인요양시설	260	9	1	1	1	-	2	-	-	1	1	1	-	-	-	-	-	1
	유료노인요양시설	103	11	1	1	-	4	1	1	-	-	1	-	1	-	-	1	-	-
	노인전문요양시설	184	7	2	-	1	2	-	-	-	-	1	1	-	-	-	-	-	-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24	-	-	-	-	-	-	-	-	-	-	-	-	-	-	-	-	-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70	1	-	-	-	1	-	-	-	-	-	-	-	-	-	-	-	-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전문병원	83	7	1	1	-	-	-	1	-	-	1	3	-	-	-	-	-	-
	노인복지회관	183	10	2	-	1	1	1	-	-	1	1	-	-	-	1	1	1	-
	경로당[1]	55,504	5,254	593	402	332	435	348	446	31	287	310	432	244	274	329	325	186	280
	노인교실	1,099	43	3	-	-	7	7	6	-	1	-	-	6	1	-	1	1	10
	노인휴양소	3	-	-	-	-	-	-	-	-	-	-	-	-	-	-	-	-	-
재가노인복지시설	가정봉사원파견시설	523	22	5	1	-	3	1	2	-	2	1	2	1	2	1	1	-	1
	가정봉사원교육시설	4	1	1	-	-	-	-	-	-	-	-	-	-	-	-	-	-	-
	주간보호시설	409	8	5	1	-	-	-	-	-	-	-	1	1	-	-	-	-	-
	단기보호시설	113	4	2	1	-	-	-	-	-	-	-	1	-	-	-	-	-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19	1	1	-	-	-	-	-	-	-	-	-	-	-	-	-	-	-

자료 : 2006년 노인복지시설 현황(보건복지부), 충청남도 내부자료.
주 : 경로당은 미신고시설이 포함된 수치임.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의 유형구분은 2008년 하반기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보다 단순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의 충청남도에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인구 증가율이나 대전과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이라는 측면에서 외부적인 유입요인을 고려해보면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3) 장사복지시설

(1) 묘지현황

충청남도의 장사복지시설 중 묘지시설은 총 16개소(공설 8, 사설 8)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외에 공동묘지가 722개소에 18.5천㎢가 설치운영 중이다. 그리고 충남도 전역에 산재된 일반묘지 중 파악된 것이 8.9천㎢가 개인이나 종중 및 종교 단체의 묘지이다.

〈표 5〉 묘지시설 현황(2007년 기준)

(단위 : 개소, 천㎢)

구분	계(면적)	일반묘지	공설공원묘지		사설법인묘지		공동묘지	
			개소수	면적	개소수	면적	개소수	면적
충청남도	31.2	8.9	8	1.0	8	3.0	722	18.5

자료 : 충청남도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2) 화장장 현황

충남도내의 화장장은 홍성화장장 1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화장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충남은 권역이 넓고 수도권과도 가까운 권역이라는 측면에서 판단하면 도의 서남부 지역에 화장장을 증설할 필요가 있다.

〈표 6〉 화장시설 현황(2007년 기준)

(단위 : 천 원)

소재지	대표자	화장기수	요금내역(천원)	종사자수	주요시설
홍성 금마면 봉서리 120-13	홍성군수	8기	· 만15세이상 : 120 · 만15세미만 : 90 · 개장유골 : 50 · 사산태아 : 40	9명	납골당, 장례식장, 주차장 등

자료 : 충청남도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3) 납골당(봉안당) 현황

화장문화의 확산과 함께 기존의 매장문화에서의 주된 시설이었던 묘지시설보다는 시신을 화장하고 납골을 봉안하는 납골묘나 납골탑이 선호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지방정부나 재단법인 혹은 종교단체 등에서 대규모의 납골당(봉안당)을 설치 · 운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과다한 석물사용과 고액의 이용료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정부 차원의 개입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2007년 기준으로 충청남도에 설치 · 운영 중인 납골당 수는 전체 23개소(공설 15, 사설 8)이며 비교적 그 규모가 큰 시설이 많다.

〈표 7〉 시 · 군 납골당 현황(2007년 기준)

(단위 : 개소)

소재지	납골당		
	계	공설	사설
시 · 군계	23	15	8
천안시	1	1	-
공주시	-	-	-
보령시	1	1	-
아산시	1	-	1
서산시	2	1	1
논산시	2	1	1
계룡시	1	1	-
금산군	4	1	3
연기군	2	1	1
부여군	1	-	1
서천군	1	1	-
청양군	1	1	-
홍성군	1	1	-
예산군	2	2	-
태안군	1	1	-
당진군	2	2	-

자료 : 충청남도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4) 장사복지시설의 분석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사복지시설은 묘지, 화장장, 납골(봉안)당, 산골형태의 자연장(수목장)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매장위주의 장묘문화를 유지해 왔고 이는 같은 동양권인 중국이나 일본과도 차이가 있는 관혼상제의 방식으로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화장문화운동에 기점을 두고 최근 15년간에 걸쳐 급격한 화장율의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화장문화의 확산과 함께 새롭게 대두된 사회문제는 충분한 화장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고, 그로 인한 지역이기주의적이고 왜곡된 님비현상으로 화장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중앙정부나 일부 대도시지역 지방정부에서 화장장과 납골(봉안)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치하려는 정책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의 극심한 마찰을 빚는 사례는 허다한 실정에 있다.[3]

이렇게 볼 때 충남도 역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빠른 고령화 정도나 수도권 인근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장사복지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 그 중에서도 화장장은 현재 홍성 화장장 1개소에 불과하므로 증설이 있어야 한다.

3. 노인복지대상자 및 재원 분석

1) 노인복지사업 세부 내용

노인복지서비스는 크게 보면 노인소득보장과 노인의료보장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세분하여 본다면 저소득노인의 최저생활보장사업, 만성질환노인의 요양보장, 건강한 노인의 인력활용, 노인권리증진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저소득노인을 위한 최저생활보장사업에는 공공부조대상자로 책정된 노인들에게 급여되는 기초생활보장부문은 공공부조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사업의 성격이 중첩된 영역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앞에서 파악된 고령인구와 노인복지관련시설운영 및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게 되는 급여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고 개별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를 분석하고자 한다.

3) 경기도 하남시의 광역장묘단지 유치계획 등으로 빚어진 단체장에 대한 주민투표 사례나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에 설치될 서울시 추모공원을 둘러싼 서울시와 기초자치단체, 시민단체, 주민 간의 갈등이 전국적으로 산재한다.

그리고 분석방법에 있어서는 현 충청남도의 노인복지정책부서인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산하에 배치되어 있는 '경로복지담당'과 '저출산고령화담당'의 양대 계 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명칭에 따라 세분하고자 한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복지분야의 주요사업은 노인복지관련 시설운영비와 소득보장을 위한 사업,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8〉 노인복지사업별 소요 재원(2007~2010)

(단위 : 건/명, 백만 원)

세부사업 내용		연차별 사업계획			
		2007	2008	2009	2010
계	지원대상	346,052	355,179	265,298	368,399
	소요예산	111,382	116,907	107,749	94,938
	국비	34,348	34,045	25,156	17,939
	지방비	79,180	82,562	82,294	76,999
1.노인일자리사업	지원대상	6,000	6,000	7,000	-
	소요예산	9,743	12,636	14,733	-
	국비	4,871	6,168	7,217	-
	지방비	4,871	6,168	7,217	-
2.경로연금	지원대상	51,000	50,000	49,000	49,000
	소요예산	24,155	22,000	21,000	21,000
	국비	16,909	15,400	14,700	14,700
	지방비	7,246	6,600	6,300	6,300
3.경로당 운영비	지원대상	5,200	5,300	5,400	5,500
	소요예산	6,344	6,466	6,588	6,710
	국비	-	-	-	-
	지방비	6,344	6,466	6,588	6,710
4.노인교통수당	지원대상	280,000	290,000	300,000	310,000
	소요예산	42,000	43,500	45,000	46,500
	국비	-	-	-	-
	지방비	42,000	43,500	45,000	46,500
5.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대상	22	40	50	50
	소요예산	12,955	12,955	6,478	6,478
	국비	6,477	6,4777	3,239	3,239
	지방비	6,478	6,478	3,239	3,239
6.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대상	28	33	40	40
	소요예산	10,035	12,000	6,000	6,000
	국비	6,091	6,000	-	-
	지방비	6,091	6,000	6,000	6,000

세부사업 내용		연차별 사업계획			
		2007	2008	2009	2010
7 무료경로 식당운영	지원대상	2,040	2,040	2,040	2,040
	소요예산	1,836	1,836	1,836	1,836
	국비	-	1,836	-	-
	지방비	1,836	-	1,836	1,836
8.저소득재가노인식사 배달사업	지원대상	1,752	1,752	1,752	1,752
	소요예산	1,314	1,314	1,314	1,314
	국비	-	-	-	-
	지방비	1,314	1,314	1,314	1,314
9.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지원	지원대상	10	14	-	17
	소요예산	3,000	4,200	16	5,100
	국비	-	-	4,800	-
	지방비	3,000	4,200	4,800	5,100

자료 :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2007~2010)』, pp. 387~388 참조.
주 :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은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으로 통합예정임.

2) 노인복지사업 예산분석

〈표 8〉에 나타난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을 분석해보면 우선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 실시로 사업이 종료되는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따른 예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 소요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경로연금은 51,000명에 총 24,155백만원(국비 16,909백만원, 지방비 7,246백만원)이 지원된다. 그리고 노인교통수당은 280,000명에게 총 42,000백만원을 전액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어서 시·도 및 시·군의 재정부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노인복지시설과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로당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운영비,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등의 비중이 크다. 그 중에서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과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가 크지만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하에서는 상당수의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관으로 이전될 계획이므로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4]

4) 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세부적인 규칙이나 재정운영 지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지방정부의 재정소요진단은 추정치에 해당한다.

셋째로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저소득재가노인식사 배달사업 등의 재가노인들을 위해 투자되는 소요예산부문과 건강한 노인들의 일자리 제공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영역이 있다.

이외에도 장사복지시설운영이나 도지사 특별시책 혹은 시·군의 자체사업이 있을 수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소요재정이 미미한 수준에 있다.

Ⅲ. 충남의 노인복지정책 과제

1. 저소득노인의 최저생활보장

1) 기초생활수급노인의 생활보장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인구학적 연령기준이 아니라 소득기준에 따라 수급권을 주고 있으나 실제로는 상당수 노인층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원칙적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분야인 노인복지영역이 아니라 공공부조정책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기초생활보장프로그램의 일부는 노인복지서비스분야와 중첩되는 부문도 있다.

소득기준을 정하기 위한 자산조사(means-test)과정에서는 시·도의 정서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성과 재량권이 어느 정도 적용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충남도는 노인인구가 타 시·시도에 비하여 많고 저소득 농어업인구가 많다는 점에서 본다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수급권자 선정이 필요하다.

2) 저소득노인 기초노령연금보장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기존의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연금에 속하지만 평소에 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무각출 연금제도에 해당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민연금재정위기에 대응하여 국민연금법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저소득 노인층에게는 새롭게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이며, 2008년 1월부터 시행되므로 실제로는 차기 정부에서 추진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므로 2007년 기준으로는 기존의 경로연금제도와 노인교통수당지급제도가 이 제도에 통합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분석을 배경으로 새로운 정책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지방정부에서는 그동안 노인교통수당 지급예산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일각에서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없지 않았다. 충남도의 경우에도 노인인구가 많아 연간 27만 명 정도에게 신청자에 한하여 개인당 연 15만원을 분기별로 나누어 계좌입금 처리해 왔으며 연간 420억원의 재정이 소요되었다.

이에 비하여 경로연금은 저소득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자산조사에서 충족되는 경우에 무배우자 월 3만5천원, 부부동시수급자는 3만원 정도를 지급하고[5],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의 경우에는 80세 미만은 월 4만5천원, 80세 이상은 5만원을 지급해 왔으며, 연간 5만 명에게 204억원의 재정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 · 도와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중앙정부의 긴밀한 협조로 기초노령연금보장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2. 만성질환노인의 요양보장

1) 농어촌 노인의료시설 지원 및 특수시책 실시

노인은 생물학적 노화과정에 있으므로 각종 만성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충남지역은 천안, 아산 등의 일부 도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이며 이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인구의 규모도 많은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지역에는 인구밀도가 높지 않으므로 중 · 대규모의 의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농어촌에 위치한 소규모의 의료시설은 의료장비가 노후화되고 경영상의 어려움도 여전하다.

그러므로 대전시나 서울권역의 대도시에 위치한 대규모의 병원과 연계한 화상 또는 영상진료시스템을 지역의 병의원이나 보건소 · 보건지소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시 · 도 차원의 특수시책이 요구된다. 특수시책은 중앙정부의 일정 지원을 받거나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저예산을 투입하여 고효율적인 기대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아울러 차상위 노인세대에 대한 의료급여대책도 홍보를 강화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의료보장이 확충되어야 한다.

5) 2007년 기준으로 1933. 7. 1 이전 출생한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기준을 적용한다.

2)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화장시설 확충 및 보강

평균수명의 증가에 비하여 건강수명의 증가 속도는 미진하여 노인들 중에는 만성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충남도의 노인복지시설의 규모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앙정부가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앞두고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관련 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지만 이에 대한 도 단위의 자구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충남도의 경우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이 2007년 기준으로 45개소가 있지만 대도시 지역에 위치한 시설에 비하여 시설 규모나 그 기능이 열악한 실정이다. 새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를 예측하고 타 시·도의 선진시설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수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이미 설치된 지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도 기능보강사업이나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단 1개소에 불과한 화장장 역시 적정 지역을 물색하여 타당성 용역 등을 거쳐 확충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3)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확대

(1) 보건소의 방문간호와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2007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군·구의 주민생활지원국 체제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본다면 보건·의료서비스 부문이 간과된 측면이 많다. 현행 시·군의 사회복지행정체계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의 2개과 형태로 주로 이루어져 있지만 노인이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그렇게 유용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없다.

노인의 특성이 신체적으로 노쇠한 경우가 많으므로 지방정부에서는 보건소의 보건인력이나 간호인력을 마을 단위에 투입하는 간호서비스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여러 차례 재편을 거듭해 온 사회복지 전달체계이지만 또 다시 재가노인의 욕구에 맞는 시스템으로 재구축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무소 형태로 거듭나든지 아니면 김영삼 정부시기에 시범사업을 했으나 확산되지 못했던 보건복지사무소 유형으로 재편하여 공공부조업무는 일반 행정직 등이 담당하도록 배치하고 복지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직이 수행하도록 하며, 방문간호사업은 보건직과 간호직이 맡게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2) 이동노인복지관사업 도입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현재 일부 노인복지관을 통해 운영되는 농어촌 지역 이동복지관은 적은 투자비용으로 고효율을 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기존 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설치하고도 이용자들이 접근성에 애로가 있어서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여 두렷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농어촌형 이동노인복지관은 찾아가는 복지(Out-Reach Service)시스템의 장점을 구현할 수 있다.

특히 노인은 다른 계층에 비하여 정보에 불리하고 복지욕구는 있으나 적극적인 획득 노력이 부족한 전형적인 소극적 클라이언트(Client)에 해당하므로 이동노인복지관을 중형버스에 장착하여 지역에 위치한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유용할 수 있다.

3. 건강한 노인의 인력활용

1) 노인취업부문의 확대

2007년 기준으로 충남도가 추진 중인 노인취업대책으로는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사업과 노인취업박람회, 시니어클럽 1개소(부여군) 정도가 있다. 충청남도가 전국평균보다 10년 빠른 1990년에 고령인구가 7.9%로 고령화 사회를 지났고 이제는 고령사회에 접어든 시점이라고 본다면 타 시·도에 비하여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 조치가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노인인구를 막연히 부양인구로만 편협하게 볼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일할 의욕이 있는 비교적 건강한 노인층(65~70세)을 대상으로 한 취업대책과 일자리유지대책이 있어야 한다.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부담해야 하는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는 증가하게 되는데 2005년 기준으로 노년부양비는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도시와 경기도는 전국 수준인 12.6%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충남(21.5%), 전남(27.3%), 경북(21.0%) 등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충남의 경우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서해안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젊은 계층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다소 완화될 수는 있으나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보장이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

로 한 고용촉진사업과 시장참여형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가 요구된다.

그리고 현재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사업으로 단기간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한계점이 있는 만큼 충남도 차원의 '노인인력활용전문기구'를 설치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노인을 사회적 부양대상자만이 아닌 자립대상으로 하는 정책전환의 기점이 될 수 있다.

〈표 9〉 시·군별 노인일자리사업 현황(2007년 기준)

(단위 : 건, 천 원)

구분	유형별 사업계획											
	승인사업 소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6,773	9,525,060	3,928	5,620,753	434	648,485	1,417	2,433,877	741	799,645	223	22,300
천안시	1,360	1,915,636	907	1,360,500	140	217,000	93	242,636	70	80,500	150	15,000
공주시	442	626,764	347	463,914	-	-	95	162,850	-	-	-	-
보령시	320	427,915	154	203,661	39	60,450	78	120,884	36	41,620	13	1,300
아산시	442	610,186	144	216,000	45	69,750	93	182,436	120	138,000	40	4,000
서산시	340	481,083	175	244,983	30	39,900	105	161,700	30	34,500	-	-
논산시	328	464,658	206	300,763	20	19,055	82	121,840	20	23,000	-	-
계룡시	79	106,152	34	42,070	-	-	21	36,482	24	27,600	-	-
금산군	328	464,320	188	243,158	15	23,250	109	180,800	16	18,400	-	-
연기군	411	528,193	240	276,943	11	12,100	150	225,000	10	14,150	-	-
부여군	435	594,701	173	256,040	19	29,415	130	192,949	113	118,935	-	-
서천군	280	427,928	91	118,416	5	7,750	164	280,200	20	23,000	-	-
청양군	224	314,157	115	204,617	5	7,750	33	60,350	41	41,440	-	-
홍성군	282	397,135	135	194,258	18	30,065	65	139,750	64	34,500	-	-
예산군	398	551,972	258	344,472	20	31,000	50	96,000	70	80,500	-	-
태안군	341	490,320	170	250,958	42	62,000	87	130,000	42	48,800	-	-
당진군	763	1,115,700	591	900,000	25	39,000	62	100,000	65	74,700	-	-

자료 : 충청남도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2) 노인자원봉사 및 평생교육의 활성화

(1) 노인자원봉사부문 활성화

건강한 노인을 위한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대책으로는 취업부문 이외에도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전략이 도입될 수 있다. 즉 근로능력이 있고 취업욕구가 있는 노인들에게는 고용

촉진과 고용유지를 위한 취업전략이 요구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경험을 살려 사회에 유익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노인계층에게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물론 노인취미활동을 위한 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체육시설 등의 공급도 유용할 수 있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타정신(altruism)이 있으므로 여생을 남을 위해 봉사하려는 욕구에 대응한 사회봉사나 자원봉사부문의 인력활용대책이 요구되어진다. 특히 사회복지분야나 아동 · 청소년 교육분야의 자원봉사인력으로 활용하는 서비스 정책이 요구된다. 머지않은 시기에 노인인구가 20%가 되는 초고령사회를 겪게 될 충남에서는 타 시 · 도에 앞선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개발 지원도 요구된다.

(2) 노인평생교육의 확산

노인의 무료함과 사회참여욕구를 평생교육체제를 통하여 인적 자원으로 개발하는 대책은 사회통합과 세대간 연대감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최근의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은 일반 성인교육[6]과는 다른 노인교육, 즉 교육노년학(educational gerontology)의 중요성을 더해주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의미는 1950년대부터 활발히 진행된 노화에 관한 연구와 노년학의 하위분야로 정립된 교육노년학에서 발로된 것이며 라벨(J. Label)이 제로고지(zerogogy)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교육학은 페다고지와 안드라고지, 그리고 제로고지의 맥락에서 평생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충남도에 있어서도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세대통합교육이나 정보화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4. 노인의 안전 및 권리증진

1) 노인 안전 및 친화 대책

6) 전통적으로 교육학을 의미하는 페다고지(pedagogy)는 아동교육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1883년 독일의 교사인 케프(Kapp)가 안드라고지(andragogy)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을 기초로 1970년에 노울즈(M. Knowles)가 그의 저서인 『성인교육의 현대적 실천 : 안드라고지 대 페다고지(The Modern Practice of Adult Education : Andragogy versus Pedagogy)』에서 성인교육으로서의 안드라고지를 개념화하였다.

노년기의 신체적 특징은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등의 만성질환을 보유한 고령자가 많다는 점이다. 이들은 고령이면서 동시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른바 노인장애인이라는 복합적 개념의 대상자가 된다.

이러한 노인장애인을 비롯한 고령층에게는 신체적 특성에 맞는 거주공간과 이동대책이 요구된다. 법제상으로는 '노인 · 장애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동건물이나 시설 혹은 다중 집합 장소에는 안전한 시설물을 갖추도록 지도 ·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정부에서는 고령자에게 친화적인 주거모델이나 생산모델을 개발하여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부여군 규암면에 고령친화모델로 시범사업을 통해 주거 · 요양 · 일자리 · 복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지만 대전광역시와 인접한 논산시나 공주시, 금산군 일원에도 통합적 노인복지서비스타운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2) 노인학대예방 및 권리증진

생애발달주기에 있어서 아동과 노인 시기는 청장년시기에 비하여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유약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않으면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가족이나 타인들로부터 학대를 당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다.

과거 농경사회나 전통사회에서는 노인들은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원로의 역할을 해 왔으며 종교나 문화적으로도 존경의 대상으로 위상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고 지식 · 정보화 사회에 접한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노인들의 지위나 역할을 유지되지 못하고 젊은 세대들로부터 밀려나거나 심지어는 학대의 대상으로 자리매김되기도 한다.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으로는 충남도에서 2004년 6월부터 아산시에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예방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추가 증설이 요구된다.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천안시와 보령시에 배치되어 있듯이 노인보호전문기관도 논산시나 계룡시 인근에 추가로 1개소 정도를 우선 증설하고 추후에는 홍성 · 예산 지역에도 증설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예방교육이나 처리업무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자아강화프로그램이나 역량강화를 위한 상담프로그램도 동시에 수행토록 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노인복지부문의 충남도정방향과 과제를 개괄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저소득 노인층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기초생활보장비를 상향하고, 특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층이 급여대상자 선정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고령사회의 특징인 만성질환노인의 요양보장을 위하여 장기요양시설을 확충함은 물론 재가노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문의료시설의 확충도 요구된다.

셋째, 건강한 노인의 성공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취업부문의 호가대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공급되어야 한다. 아울러 노년기에 적합한 평생교육시스템도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노인의 사회적 역할 축소와 함께 대두되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권리증진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확대와 함께 노인과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지역사회교육이 대안이 된다.

2. 제언

이제 이러한 노인복지정책과제를 실천하고 구현할 충남도정의 수장이며 리더인 도지사와 개별정책을 집행하는 관리자와 실무자에게 요구되는 시사점을 정책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은 충남도가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는 측면에서 이에 걸맞은 복지행정기구와 인력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구상으로는 노인복지과 혹은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신설이 요구되며, 후자의 경우는 고령자 중에서 장애 인구가 많다는 차원에서 보면 선호될 수 있는 명칭이다. 아울러 인력 상으로는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고 사회복지철학을 가진 인력을 배치하고 장기간 보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인복지사업이나 정책에서도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공공부조 측면의 저소득층 위주

의 사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중산층 노인들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의 기획도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노인인권과 권리증진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서남부권에 증설할 필요도 있다. 그 외에도 대도시 인근인 금산이나 논산, 공주 등 지역에 노인종합복지타운(시니어 타운)의 조성도 요구된다.

끝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16개 시·군과의 밀접한 복지전달체계 유지를 위한 연계정책이 요구되며 대외적으로는 도의회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민간복지단체를 활용한 복지인프라 확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략도 강구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충남지역사회복지계획(2006-2010)』에서 지향하는 이념인 '충남, 생활복지의 중심'을 달성할 수 있는 관건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고수헌, 민선4기 충남도정의 사회복지과제, 『열린충남』, 통권 제35호, 충남발전연구원, 2006

고수헌, 『새로운 노인복지론』, 양서원, 2006

고수헌, 『사회복지정책의 이행과정』, 교육과학사, 2006

고수헌, 『지역사회복지-이론과 실천-』, 교육과학사, 2007

고수헌 외, 『충청남도지역사회복지계획(2007~2010)』, 충청남도, 2007

대한민국정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2006

충청남도 기획관리실, 『도정백서』, 충청남도, 2006

송두범 외, 『충청남도 인적 자원개발 실행계획』 외 다수, 2005